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근 10년간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형법범죄가 증가하였음에도 교통범죄 등 특별법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형법범죄의 증가는 재산범죄와 강력범죄(흉악)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 2020년에는 재산범죄를 제외한 강력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 모두 감소하였고,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 역시 감소했다.
- 우리나라의 살해 발생률은 남녀 모두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남성 대비 여성의 살해 발생률은 OECD 평균보다 높다.
-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모든 연령대의 외인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여성에 비하여 남성 외인 사망률의 감소폭이 크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과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으나, 2020년에는 사망 및 실종자 수와 재산피해액이 증가했다.
-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건축물 등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특히 2021년에는 대형산불 등의 영향으로 재산피해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감소했다.

- 일반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안전은 크게 사회적 안전과 자연재난, 인적 사고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범죄와 테러, 자살 등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범죄의 발생 현황과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며,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및 폭설, 감염병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다루었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이,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 화재, 교통 사고를 주로 살펴보았다.



한편, 범죄와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력과 소방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인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인해보았다.

범죄(사회적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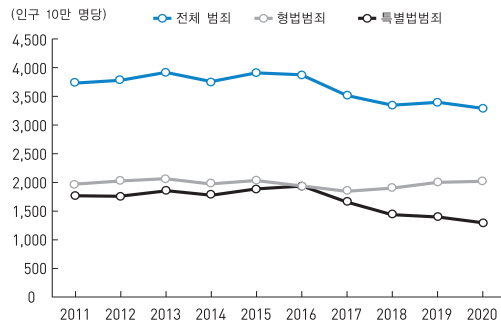
범죄발생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 나타내는데, 201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75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7년 3,524건으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308건이 발생하여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전체 범죄의 감소현상은 특별법범죄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범죄는 형법범죄(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와 특별법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성된다. 지난 10년간 형법범죄 발생률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인구 10만 명당 1,966건에서 2020년 2,015건으로 늘었다. 반면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2011년 인구 10만 명당 1,785건에서 2020년 1,293건으로 줄었고, 특히 2017년 이후 감소폭이 크다. 그 결과 2010년 이

전에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이 형법범죄 발생률보다 높았으나, 2011년부터는 형법범죄 발생률이 특별법범죄 발생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2018년 이후 형법과 특별법 범죄간의 발생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그림 X-1).

[그림 X-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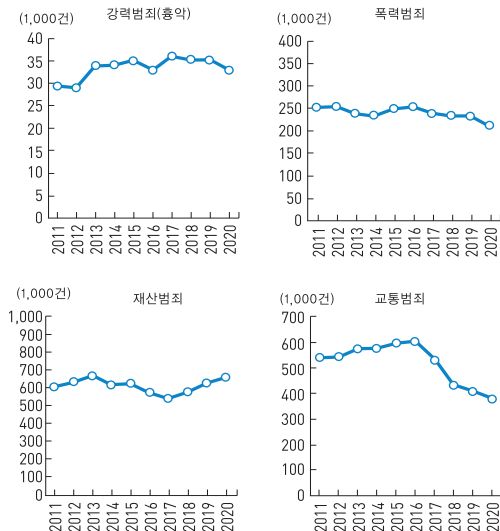
주: 1) 범죄율=해당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2020년의 범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71만 4,579건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다. 형법범죄는 104만 4,438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0.3% 증가한데 비해, 특별법범죄는 67만 141건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하였다(그림 X-1).

범죄유형에 따라서도 범죄발생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지난 10년간 강력범죄(흉악)와 재산범죄는 증가한 반면, 교통범죄와 폭력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강력범죄(흉악)는 2011년 2만 9,382건에서 2020년 3만 2,812건으로 최근 10년간 11.7% 증가하였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는 상황이다. 재산범죄는 2011년



[그림 X-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2011~2020



- 주: 1) 강력범죄(흉악)는 형법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함.
 2) 폭력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 등을 포함함.
 3) 재산범죄는 형법범죄 중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을 포함함.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위반범죄와 교통방해죄를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60만 5,549건에서 2013년 66만 7,21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20년에는 65만 9,058건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8.8% 증가하였다. 반면, 교통범죄는 2011년 53만 9,029건에서 2016년 60만 970건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37만 7,417건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30.0% 줄었다. 폭력범죄는 같은 기간에 소폭의 등락을 보였으나 2017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으로, 10년간 25만 1,707건에서

21만 241건으로 16.5%가 줄었다.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전체 형법범죄의 증가는 재산범죄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 교통범죄와 폭력범죄는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던 강력범죄(흉악) 역시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상황임에도, 재산범죄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산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발생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형법범죄 발생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발생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유일하게 재산범죄만 5.0% 증가하였고, 폭력범죄는 9.5%, 교통범죄는 7.0%, 강력범죄(흉악)는 6.4% 감소하였다(그림 X-2).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 중에서 유일하게 성폭력범죄만이 10년 전에 비하여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폭행·상해범죄와 방화범죄 역시 완만한 등락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성폭력범죄는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2020년 3만 105건이 발생하여 2011년 2만 2,168건 대비 35.8% 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성폭력범죄 증가 현상은 실제 발생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신고율의 증가로 숨은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에는 6개 강력범죄 모두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도 강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18.1%), 폭행·상해(11.1%)와 방화범죄(10.0%)도 10% 이상 발생 건수가 줄었다(표 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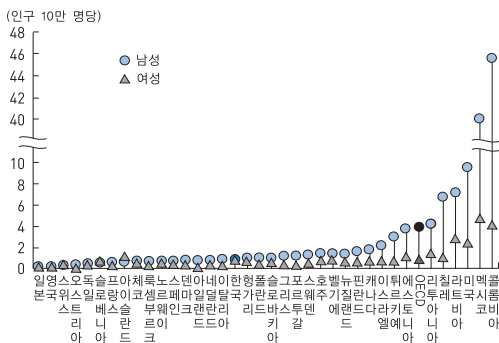
〈표 X-1〉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별 발생 건수, 2011-2020

연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2011	1,221	4,021	22,168	1,972	232,229
2012	1,022	2,626	23,376	1,882	230,635
2013	959	2,001	29,097	1,730	219,805
2014	938	1,618	29,863	1,707	214,605
2015	958	1,472	31,063	1,646	226,543
2016	948	1,181	29,357	1,477	228,710
2017	858	990	32,824	1,358	215,717
2018	849	841	32,104	1,478	208,935
2019	847	845	32,029	1,345	203,074
2020	805	692	30,105	1,210	180,604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 살해가 여성 살해 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남성인구 10만 명당 4.0건의 남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여성인구 10만 명당 0.9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의 경우

〔그림 X-3〕 OECD 국가의 피해자 성별 살인범죄 발생률, 2016



주: 1)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는 2017년 자료,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는 2015년 자료, 뉴질랜드, 슬로바키아는 2014년 자료, 그 외 국가는 2016년 자료임.

2) 살인범죄 발생률은 남성(여성)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발생 건수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

여성 살해 발생률이 남성 살해 발생률보다 높고, 일본은 남녀 발생률이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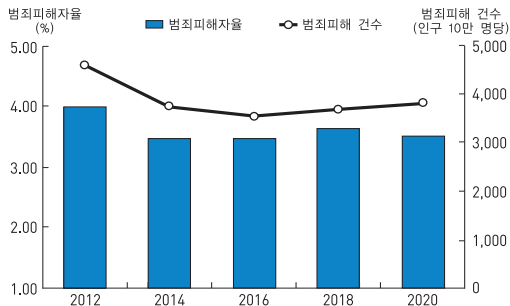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인구 10만 명당 0.9건, 여성인구 10만 명당 0.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OECD 평균에 비해 남녀 모두 살해 발생률은 낮다. 그러나 OECD 평균 여성 살해 발생률이 남성의 21.9%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88.9%로 상대적으로 여성 살해 위험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X-3).

범죄피해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집계하는 범죄발생통계를 공식범죄통계라 하며, 국가간 비교나 시계열 분석을 할 때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다만 공식범죄통계로는 신고되지 않은 범죄 즉 ‘숨은 범죄(hidden crimes)’를 파악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 통계를 수집하여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직전 연도의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건수는 2012년 4,600건에서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3,678건, 2020년 3,806건으로 증가하였다. 범죄피해자 비율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여서, 2012년 3.98%에서 2014년과 2016년에는 3.46%로 감소하였고, 그 후 소폭 증가하여, 2018년 3.63%, 2020년 3.50%이다(그림 X-4).

[그림 X-4] 범죄피해 경험률, 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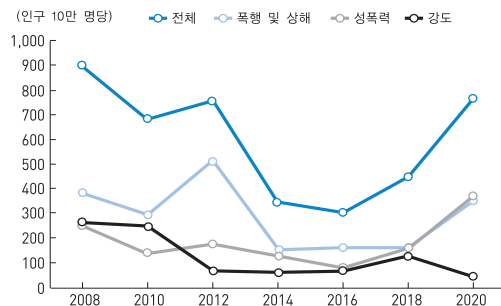
주: 1) 범죄피해자율은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2) 범죄피해 건수 기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폭행·상해, 성폭력, 강도 등과 같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 피해는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2008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899건의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6년 303건까지 줄었으나, 2018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서 202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765건까지 증가하였다. 폭력범죄는 유형별로 피해 경험률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 유형인 폭행 및 상해(협박, 괴롭힘 포함) 피해 경험률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증가하여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성폭력범죄 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조사가 진행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

면 강도범죄 피해 경험률은 2018년의 소폭 증가를 제외하면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0년을 기준으로 폭행 및 상해 범죄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355건이며, 성폭력범죄는 369건, 강도범죄는 41건이다(그림 X-5).

[그림 X-5]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20



주: 1) 폭력범죄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폭행 및 상해, 성폭력, 강도 등 개인 대상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인적사고 및 자연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 사망)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2002년 인구 10만 명당 60.3명에서 2021년 50.9명으로 15.6% 줄었다. 2003년 증가한 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1년 이후 다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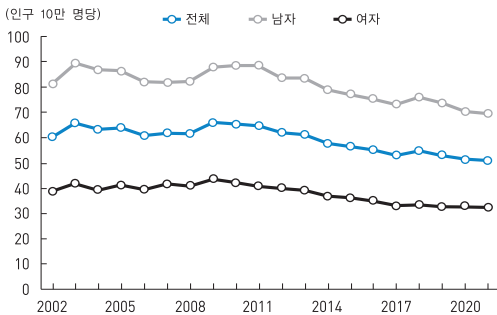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외인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는데, 이는 남성이 경제활동과 사고위험이 높



은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성 외인 사망률은 2002년 81.5명에서 2021년 69.5명으로 14.7% 감소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38.8명에서 32.5명으로 16.2% 감소하였다.

2021년을 기준으로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외인 사망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외인 사망률은 10만 명당 50.9명으로 전년도 51.5명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외인 사망률은 전년도 70.4명에서 69.5명으로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전년도 32.7명에서 32.5명으로 줄었다(그림 X-6).

[그림 X-6] 성별 외인 사망률, 200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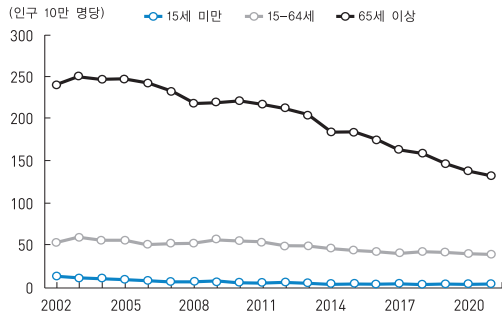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연령대별로 보면 최근 20년간 모든 연령대의 외인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5세 미만의 외인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4.2명이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외인 사망률도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1년 기준 39.5명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 감소폭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크기는 하지만 2021년 현재도 인구 10만 명당 133.3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 X-7).

[그림 X-7]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200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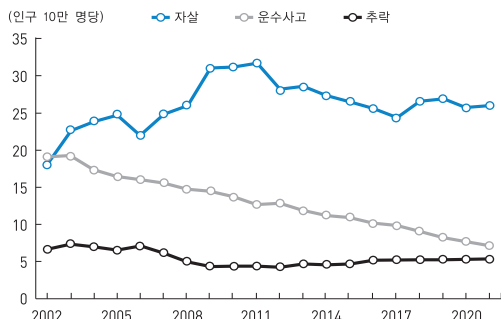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 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 ÷ 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지난 20년간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그리고 추락이었다.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인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199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감소폭이 가장 크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1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0명으로 전년 25.7명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추락사고 역시 인구 10만 명당 5.3명으로 2017년 이후 5.2명을 유지하다가 소폭 상승했다. 반면 운수 사고는 전년도 7.7명에서 7.1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8).

[그림 X-8] 주요 외인별 사망률, 2002-2021



주: 1) 사망률=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자연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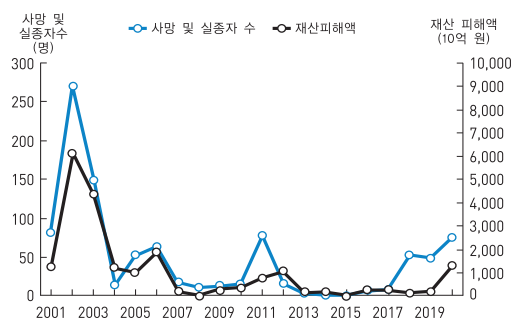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2006년 에위니아 등의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는데, 이는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18년 이후, 재산피해액은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20년에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19년 48명에서 75명으로 증가하였고, 재산피해액 역시 2019년 2,162억 원에서 1조 3,18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그림 X-9).

[그림 X-9]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2001-2020



주: 1) 재산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기준임.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 연도.

화재

화재 발생 건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됨에 따라, 2007년부터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007년 이후 매년 약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긴 하나, 2020년과 2021년 3만 건대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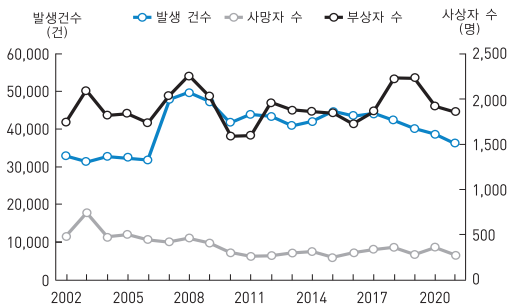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다. 화재



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3년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초기 진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꾸준히 감소하던 화재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어 약 3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00명 내외 수준을 보였다. 다만, 2018년과 2019년 부상자 수가 2000명대로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으나 2020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1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다. 화재 발생 건수(3만 6,267건)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였고, 부상자 수(1,854명)는 3.3%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276명)는 24.4%나 감소하였다(그림 X-10).

[그림 X-10]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200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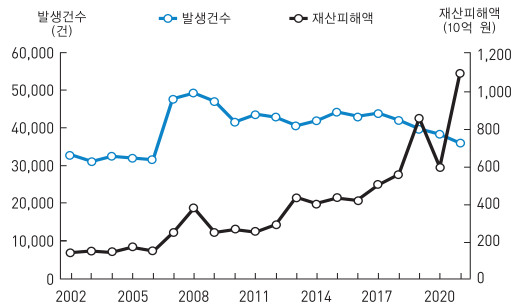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보」, 각 연도.

2009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증가가 더 큰 것은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건축물의 재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도의 경우 화재 발생 건수(3만 6,267건)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였으나, 정선 등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재산 피해액(1조 991억 원)은 전년 대비 83.0%나 증가하였다(그림 X-11).

[그림 X-11]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200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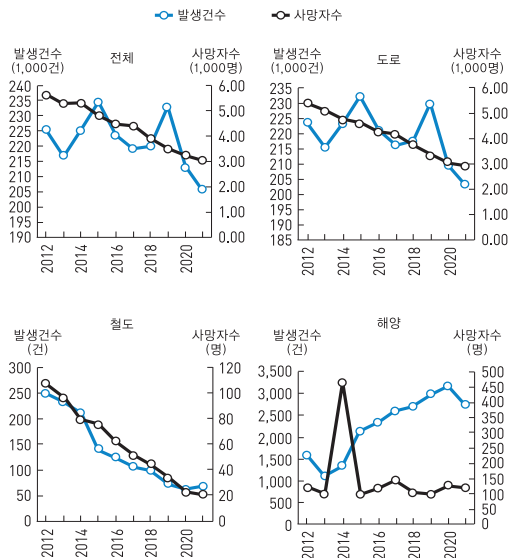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보」, 각 연도.

교통사고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감소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식이법’ 추진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사고 발생 건수 역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는 도로사고 부상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과 대조적이다. 철도사고는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양사고는 2007년 이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07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다만,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X-12]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12~2021



주: 1)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항공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22.

2021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만 5,928건으로 전년 21만 2,882건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로사고와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철도사고는 전년도 58건에서 65건으로 증가하였다. 사망자 수는 도로사고, 철도사고, 해양사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그림 X-12).

경찰력 및 소방력

최근 15년 동안 경찰관과 소방관 정원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 1인당 담

〈표 X-2〉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6~2020

연도	경찰관		소방관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2006	95,613	507	30,199	1,604
2007	96,324	505	30,630	1,589
2008	97,732	502	31,918	1,537
2009	99,554	495	33,992	1,451
2010	101,108	490	36,711	1,350
2011	101,239	493	37,826	1,320
2012	102,386	490	38,557	1,302
2013	105,357	479	39,519	1,276
2014	109,364	464	40,406	1,256
2015	113,077	451	42,634	1,197
2016	114,658	447	44,121	1,161
2017	116,584	441	48,042	1,069
2018	118,651	435	52,245	987
2019	122,913	421	56,647	914
2020	126,227	411	60,994	850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경찰관 정원 수.

2)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소방관 정원 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소방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



당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경찰관 수는 2006년 9만 5,613명에서 2020년 12만 6,227명으로 증가하였고,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7명에서 411명으로 감소하였다. 소방관 수는 2006년 3만 199명에서 2020년 6만 994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604명에서 850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X-2).

안전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표 X-3>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0년 11.3%에 불과했으나, 2014년 9.5%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2020년 31.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치안)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다. 특히 범죄위험(치안)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0년 대비 18.6%p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화재는 7.6%p로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조사 시점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사 시점마다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2014년의 경우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이후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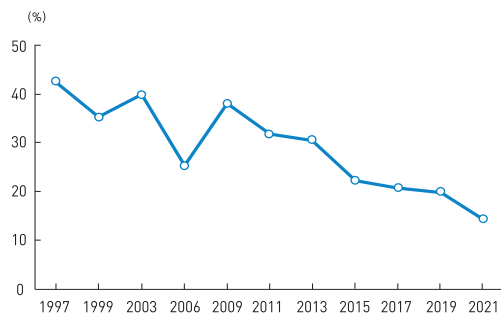
일반 국민들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을 뿐 아니라,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감소하고 있다. [그림 X-13]에서 보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997년에는 42.4%, 2009년에는 37.9%에 이르렀으나, 이후 꾸준히

<표 X-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0-2020

	(%)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반적인 사회안전	11.3	13.7	9.5	13.2	20.5	31.8
자연재해	18.8	23.3	15.1	20.8	22.7	37.0
교통사고	8.0	9.4	7.3	10.2	13.1	21.7
화재	16.6	17.7	14.2	19.1	20.9	24.2
범죄위험(치안)	8.2	9.1	8.9	9.2	17.2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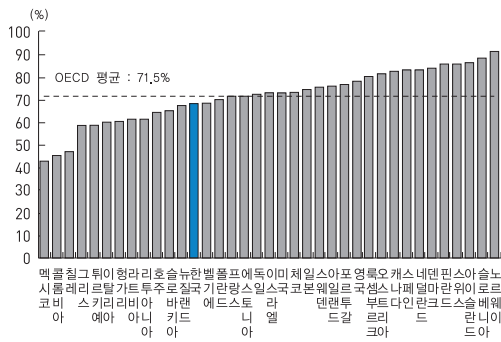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단, 2010년 자료의 경우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X-13]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1997-2021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3년부터 표준화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1997-2006; 「전국범죄피해조사」, 2009-2021.

[그림 X-14]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18



주: 1) 야간보행안전도는 각 국 조사대상자(15세 이상) 중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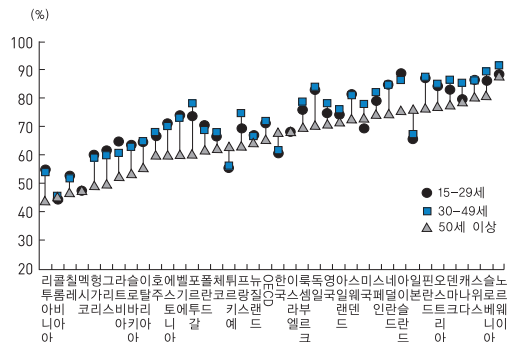
출처: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

감소하여 2021년에는 14.3%로 떨어졌다. 지난 20여 년간 소폭의 등락 현상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야간보행안전도('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는 2018년에 68.4%로 OECD 평균인 71.5%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은 노르웨이(91.2%), 슬로베니아(88.3%), 아이슬란드(86.2%), 스위스(85.9%)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 멕시코(42.5%), 칠레(47.0%), 이탈리아(59.9%), 헝가리(60.3%) 등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그림 X-14).

야간보행 두려움 수준은 연령에 따라 상이하

[그림 X-15] OECD 국가의 연령대별 야간보행안전도, 2018



주: 1) 야간보행안전도는 각 국 조사대상자(15세 이상) 중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

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다. OECD 국가의 연령대별 야간보행안전도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50세 이상의 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 평균 역시 30~49세(72.1%)와 15~29세(71.2%)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50세 이상(65.7%)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튀르키예, 콜롬비아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연령대가 가장 높은 집단(50세 이상)이 두려움 수준이 낮고, 연령이 낮은 집단(15~29세)의 두려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X-15).